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2 -
“국민 편리, 대중스포츠 위상에 걸맞도록!”
‘대중골프장 운영 건전화’ 공약 발표

- 골프 인구 500만 시대…대중화 노력으로 이용층 확대 및 대중골프장 수 2배 증가, 시장 규모 5.6조원
- 비싼 이용료, 유사회원 모집 등 문제, 지난 2년간 요금 인상 19% 달해
-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근절, 운영심사제 도입으로 철저한 점검 등 개선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4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대중골프장 운영 건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제는 500만이 즐길 정도로 대중화된 골프 산업의 운영방식을 건전하게 개선하여 편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IMF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박세리 선수의 활약을 기억한다”며, “그 이후 골프는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대중스포츠화 흐름에 맞춰 역대 정부도 골프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대중골프장을 보급한 결과 지난 10년간 그 수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골프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전유물이었으나 점차 중산층과 젊은 층으로 확대되었고, 코로나 19로 외국 골프장 이용 수요까지 국내로 몰려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현재 골프시장 규모는 약 5.6조원, 이용객수는 500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크게 늘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지난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방식을 건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명시된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금지나 이용우선권 제공 및 판매 금지 등의 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 운영 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액의 합은 총 7,000억 원이 넘는다.

이 후보는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Q&A 및 참고자료

Q.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실태는?

○ 대중제 골프장의 대표적인 ‘꼼수영업’ 사례

- 현행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골프장을 우선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발생

대중제 골프장들의 주요 ‘꼼수영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 이용요금 할인 ▪ 골프텔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예약포함) 제공 ▪ 대중골프장에서도 별도 회원모집에 우선예약권 부여 ▪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 이용 혜택 부여 ▪ 회원제 + 퍼블릭 코스를 모두 회원제처럼 운영 	

실제 적발 사례	
A 대중골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회원권 2,400만원, 연회비 20만원을 내면 VIP평생회원 자격을 주고 동반자 3인도 '동반회원' 대우를 해줌 - 대중제 골프장에는 존재할 수 없는 '정회원'은 주중 4만5000원, 주말 7만5000원을 받고 동반자 3인은 주중 7만6000원, 주말 10만원으로 이용 가능 -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600명. 가입비 총액은 100억원을 넘음
B 대중골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넘는 회원권을 '출자약정서' 형태로 판매 - 이 약정서에는 무기명 회원권 양도 가능, 정회원에게 프라이빗 하우스 이용권 등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기존 회원권(채권) 거래'도 문제가 됨 -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수익 원대에 거래됨

Q. 대중제 골프장 폭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과 세제혜택 차이는?

-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함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 (단위: 만원, 2021년 6월기준)

구분	주중			주말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수도권	1.3	20.3	19	1.4	26.2	24.8
강원권	2.3	20.1	17.8	2.6	25	22.4
충청권	0.1	17.2	17.1	-0.5	22.3	22.8
호남권	1.3	14.4	13.1	1.4	18.2	16.8
영남권	3.5	17.1	13.6	3.3	20.9	17.6
제주권	3.9	18	14.1	5.4	22.6	17.2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대중골프장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만 연간 약 6천억원(2018~2020년, 3년 평균)으로, 골프장 한 개당 약 16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

골프장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세금 부과 현황 <자료-양경숙 의원실>

구분	세금종류			대중제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취득세	취득세			4%	12%	4%
보유세	재산세	토지	개발지	0.2~0.4% (별도합산)	4% (분리과세)	3% (분리과세)
			원형보전지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 (분리과세)
		건축물 등		0.25%	4%	0.25%
	종부세	토지	개발지	0.5~0.7% (별도합산)	없음	없음
			원형보전지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없음
	이용세	개별소비세			없음	12,000원
교육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 이익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환원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회원제가 4%인 반면 퍼블릭은 0.8%이며, 건물분은 회원제 4%보다 낮은 1%에 그친다. 똑같은 그린피를 적용했을 때 대중제가 회원제에 비해 3만~4만원 이상 순이익을 더 보게 되는 구조임
- 즉,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1인당 3~4만원의 비용을 더 내고 골프를 치는 셈
- 또한, 전국 골프장의 84%가 이용객에게 식음료 이용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21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3만원짜리 떡볶이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

Q.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횡포근절을 위한 2가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 **대중골프장 횡포근절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

- 작년 12월 31일 통과된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를 금지함
- 대중골프장 이용에 있어 예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질서를 규정함

-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골프 이용객들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골프를 즐기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올바른 골프문화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의 올바른 시행도 중요
- 한편으로 대중골프장 운영자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단속 역량에 대한 강화도 중요함

Q. 대중골프장 운영 심사제 도입 등 대중골프장 운영방식 건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대중골프장 운영방식 건전화 방안은 현재 문체부의 연구용역 결과 및 골프업계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방안임**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대중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방안**

- 골프장의 이용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상한제를 두는 등의 억제책을 도입할 수는 없음. 그러나 대중화 기여도를 충족하는 골프장에게 선별적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음

- 골프장 분류체계의 전면개편 : 기존의 고가 대중골프장은 “상업형 비회원제”로 분류, 이용가격 등 대중화 기여도를 충족하는 골프장만 (12~15만원) “대중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대중형 골프장 심사·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문체부장관 고시로 지정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			골프장 세제 개편안		
현행	➔	개편안		골 퍼	사업자
회원제	➔	상업형 회원제 비회원제	세 목	개별소비세,교육세, 농특세,부가세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중제	➔	대중형 (이용요금 상한선, 캐디 선택제 등)	상업형	동일세율 또는 회원 비회원 차등과세	동일세율 또는 회원 비회원 차등과세
			대중형	면세	현 대중제 골프장의 절반 수준

- 선별적 세제혜택 부여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부담 최소화, 기존 대중골프장이 다수 편입되어 가격 등이 관리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고가이용료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상업형 비회원제”로 분류하여 현행보다 중과세를 실시
- 골프장 분류체계의 전면개편 : 기존의 고가 대중골프장은 “상업형 비회원제”로 분류, 이용가격 등 대중화 기여도를 충족하는 골프장, 약 12~15만원의 이용료(캐디피 제외)를 유지하는 골프장에 한해 “대중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대중형 골프장 심사·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문체부장관 고시로 지정
- 공공골프장 확대 :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상승의 원인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이 필요함.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윤 극대화 목적이 아닌 공익형 골프장의 확대 필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골프장의 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하천 유희부지 등 활용하는 지자체 골프장을 확산할 계획. 이를 위해 골프장 시설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임